

북·일관계와 아베정권의 딜레마

양기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I. 북·일관계 현황
- II. 아베정권의 대북정책
- III. 과거 북·일협상의 특징
- IV. 북·일관계의 전망
- V. 납치문제의 딜레마

I. 북·일관계 현황

2004년 11월 제3차 납치문제 실무자회의가 결렬된 이후, 일본은 12만 5천 톤의 식량지원 동결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 자민당은 5단계 대북제재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 2월 어렵게 재개된 수교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일본은 신속하게 2006년 9월 19일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9일, 일본측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 이틀 후인 10월 11일 4개항의 다음과 같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둘째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 셋째 북한 국적자 입국의 원칙적 금지(단, 북한 당국 직원 이외의 자의 재입국은 예외), 넷째 추가조치(이후 일본 내 북한관련 자산 동결 및 대북 송금 차단). 아울러 10월 13일 유엔안보리에서 지난 7월 결의안(제1695호)보다 더 포괄적인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지원과 원조에 동참할 수 없다. 일본의 입장을 다른 나라들도 이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후 3월 8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일 수교에 관한 실무그룹회

의가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재개되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45분 만에 끝났다. 현재의 북·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II. 아베정권의 대북정책

2006년 8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여설적으로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대북강경과 아베에게 대단히 유리한 호재로 작용했다. 10월의 북한 핵실험은 아베 정권에게 또 다른 정치적 기회가 될 것이며, 평화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위협’은 과거에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 조치로 연계되었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정부는 당시 반대여론으로 도입이 불투명했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및 4기의 정찰위성 도입을 결정했고 5척의 이지스함과 4대의 공중급유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위협’은 미일동맹 강화의 명분으로도 작용했다.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본 응답자의 90% 이상이 ‘위협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10월 10일 교도통신 여론조사).

III. 과거 북·일협상의 특징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북·일관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북한과 일본이 서로 접근하고 협상을 시작할 때에는 북미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일협상이 활성화될 때에는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있었다. 북·일관계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일본은 북미관계가 진전하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면서 북미관계와의 대칭성을 확보하려고 해왔다. 반대로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일본 또한 북·일관계의 템포를 조절하고 때로는 협상을 결렬시켰다. 북한 또한 북·일관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북미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 북미관계를 북·일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북·일협상의 범위를 축소시키는데 활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8차 수교회담의 결렬도 북미관계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이 일본의 3가지 전제조건(북한의 UN 가입, 남북대화의 촉진, 핵사찰의 수용)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7차 회담에서 훨씬 엄격한 조건(IAEA 사찰 외에 남북 상호 핵사찰 및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등)을 새롭게 제시하여 협상결렬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의 태도변화는 북미관계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9차 수교회담이 재개된 것도 1999년 9월 12일 미국과 북한간의 베를린 고위급 회담에서의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이 있다. 북미 베를린 고위급 회담 이후 일본측은 ‘납치문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수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그때까지의 강경한 태도를 변경하여 안보문제는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 한미일과 공조하고, 납치문제는 적십자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면서 다시 수

교협상을 재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북·일협상이 활성화될 때에는 의원외교가 가동되고 있었다. 정부 간 협상에 앞서서 협상 개시 혹은 재개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바로 의원외교가 담당하였다. 1989년 1월 일본 정부는 조선로동당 대표단의 입국을 전제조건 없이 허락함으로써 북·일협상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또한 1990년 9월에는 가네마루 신 일본 자민당의 전 부총리와 다니베 마코토 사회당 위원장이 이끄는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조선로동당과 ‘3당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1999년 12월 1~3일 무라야마 전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의원 대표단은 북한 노동당 김용순 비서와의 회담을 통해 수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고, 2003년 12월 히라사와 자민당 의원과 북한 정태화 대사, 송일호 외무성 부국장과 회담, 2004년 4월 1~2일 자민당 전 부총재인 야마사키, 히라사와 의원과 정태화 대사와의 회담 등도 의원외교의 주요사례로 볼 수 있다.

IV. 북·일관계의 전망

지금 북미관계는 미국의 타협적인 태도 변화와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의 합의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정당-의원 외교도 가동되지 않고 정부 간 관계 개선의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제정치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북·일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일관계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납치문제를 둘러싼 확대재생산의 국내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정상회담은 과거 북·일수교회담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일본인 납치문제를 정상 간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국내여론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평양선언’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던 북·일수교에 대한 기대감은 몇 일만에 대북악감정으로 반전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제12차 수교회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되었다. 2004년 5월 22일 북·일 양국은 제2차 북·일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납치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젠킨스 귀환문제’ 및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문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었다. 납치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고 북한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납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할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에는 또 다른 정치적 요인도 있다. 상업적 시청률만을 의식하면서 납치문제를 감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일본의 미디어들과 ‘북한위협’과 납치문제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보수 세력들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근과 정부간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북강경정책으로 지지층을 확대하면서 정권을 출범시킨 아베 정권 자신도, 대북정책상의 유연성을 ‘자기아이덴티티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장애가 될 수 있다.

V. 납치문제의 딜레마

북한문제는 아베 정권에게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대북강경정책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은 아베 정권에게 납치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첫째, 납치문제의 장기화에 따르는 국민적 실망과 불만은 결국 아베정권을 압박하는 부메랑 효과를 산출할 것이다. 납치문제 해결에 국민적 기대가 지나치게 높고 납치문제에 대한 정치적 유연성을 스스로 제약해온 아베 정권에게 납치문제는 향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납치문제의 국제적 쟁점화는 일본의 과거 인권문제에 대한 이중기준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베 정권은 최근 미국의 의회, 행정부, 언론 등이 과거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준엄한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의 인권문제’로서의 납치문제는 ‘과거의 인권문제’로서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치적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 셋째, 아베정권의 납치문제에 대한 경직된 접근 방식은 외교정책상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일본의 안보이익에도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적 기회는 정치적 위기로 반전될 수 있다. 그 전에 북한은 진정한 사죄와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일본은 내압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2007/04/13)

